

문 대통령 “5.18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

“진실 규명 위해 진상조사위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헌법에 5.18 정신 담으면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등

이 있던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그동안 계속 5·18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0주년을 맞이해 역사적 현장 앞에서 기념식을 치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 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묘역이 아닌,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5·18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월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알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역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원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에게 각인된 그 경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위해 다시 오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뉴시스

“5.18 실제적 진실 역사 심판대 위에”

정세균 총리, “진상 규명조사위서 조사 착수 정부도 적극 협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아직도 숨겨져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실제적 진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것이아말로 한 때 불의(不義)했던 국가의 폭력이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살아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그날, 광주 시민들은 대처 중인 계엄군에게 ‘뿔’ 대신 ‘밭’을 던졌다”며 “5월의 광주 정신은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서슬 퍼런 칼날에도 항을 물고고 운기를 심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주목한다”며 “최초 발포 경위와 계엄군의 헬기사격, 민간인 학살, 인권 유린과 행방 불명 등 미해결 과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왜곡없이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5·18 기념사 2대 의제

‘진상규명·헌법전문 수록’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밝힌 2대 핵심의제는 5·18 진상규명과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5·18 해법과도 맞닿아 있어 앞으로 2대 의제가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그만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

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 3월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2년여 동안 공전을 거듭해 왔던 진상규명 조사위여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암매장 ▲북한군 개입여부·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 지난 4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핵심 미해결 과제들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발포 의혹의 당사자인 전두환씨를 비롯해 신군부 세력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도 언제 든지 탄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명화를 위해 헌법전문 수록 등 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지동폐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18석 가까이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단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5.18 진실규명, 진행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그리고 왜곡·폄훼 행위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써 사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을 밝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의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당 일각의 5·18 망언에 사죄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